

사회진보를 위한 민주연대

People's Solidarity for Social Progress

서울특별시 마포구 연남동 259-12 3층 T.02-778-4001. F.02-778-4006 pssp@jinbo.net http://www.pssp.org

2013년 2월 3주차 보건의료동향분석

2013년 2월 2일 ~ 2013년 2월 15일

주요 키워드

-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대폭 개정 예정** : 이는 30년 만에 대폭 개정하는 것으로 암 12종이 추가 인정되고, 암 유발물질에 포름알데히드·엑스선·감마선 등이 포함됨.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가 업무상 정신질환에, 만성폐쇄성폐질환이 업무상 질병에 포함됨. 만성과로 기준이 현실화되며, 호흡기계 질병 유발 물질에 새로운 항목이 추가될 예정임.
- 2. 리베이트 관련 대한의사협회 대응** : 의협은 의사들의 리베이트 수수 근절을 촉구하며, 제약회사 영업사원들의 의료기관 출입을 금지시키는 조치를 취함. 이후 영업사원 출입금지 스티커를 배포하는 등 행동에 나서고 있어, 제약업계와 개원의 일부는 혼란스러워 하는 입장을 보임.
- 3. 박근혜 당선인, 중증질환 국가보장 공약 말바꾸기** :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4대 중증질환 진료비 전액 국가부담' 관련 공약을 수정하여, 여기에는 선택진료비·병실료·간병비 항목은 여전히 비급여로 유지한다고 발표함. 무상의료운동본부에서 이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가졌고, 국회의원 12명은 정부 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공동발의함.
- 4. 간호조무사 제도 폐지 예상** : 보건복지부는 간호인력 3단계 개편방안을 마련하여, 현재 간호사-간호조무사 체계를 3단계 인력체계로 바꿈. 이는 간호사-1급 실무간호인력-2급 실무간호인력(가칭)으로 구성되며, 일정기간 이상 경력이 되면 높은 단계로 상승할 수 있는 경력상승체계가 특징임. 이에 대해 대한간호사협회는 강력히 반대하는 입장을 보이고 있음.
- 5. 기타** :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 추진 방향,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발효에 따른 제약 및 보건의료산업 지원, 1원 낙찰과 관련된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 명령, 건강증진협력약국 관련 의협의 비판, IMS 시술 관련 판결에 따른 한의사들의 반발, 보건의료노조의 간병인 현실 관련 토론회 개최 등.

1. 보건의료정책

○ 남북의료협력 방안 모색 토론회 개최 (2. 1)

위 토론회는 문정림 새누리당 의원과 대한의사협회가 개최하였다. 1부 주제인 한반도 통일을 위한 효율적 보건의료 지원 방안에서는 윤석준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교수가 발표에 나섰다. 여기서 북한의 영아사망률은 남한보다 14배 높고, 결핵 발생률은 3.5배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특히 북한은 결핵이 여러 형태로 존재하는 '다제내성 결핵' 환자가 많고, 전염성 질환과 당뇨 등 비전염성 질환 모두 심각한 것으로 나타난다고 밝혔다. 2부 토론회에서는 전문가 5명이 토론을 벌이며, 북한의 보건의료 현황 등을 소개하고 대북 보건의료 지원을 위한 방안을 모색했다. 한편 이 자리에서는 남북한 교류의 한계에 대한 지적도 나타났다.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2013년 선별집중심사대상 9개 항목 발표 (2. 4)

심평원은 진료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거나 사회적 이슈가 되며, 관리가 필요한 항목을 미리 선정해 집중 심사하는 2013년도 선별집중심사대상 9개 항목을 발표했다. 우선 국정감사와 언론보도에서 마약류 오남용 관리에 대한 필요성이 강조된 항정신성의약품 장기처방 등 7개 항목을 새롭게 선정했다. 또한 치근활택술 2개항목, 의료급여 장기 입원, 갑상선검사 4종 이상, 비관혈 관절 수동술, 경막외 조영술, 한방 입원 등의 항목이 선정되었다. 이 항목들은 진료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거나, 다반도 청구로 국민건강과 진료비에 영향을 미치는 항목들이다. 12년도 집중 심사항목 중에서는 척추수술과 약제 다품목 처방에 대해 심사를 강화할 예정이다. 심평원은 집중심사 항목에 대해 심사기준의 적극적 공개와 자율적 진료행태 개선을 유도할 예정이다.

○ 식품의약품안전청, 임상시험 실시기관 3등급 차등 관리 (2. 5)

식약청은 임상시험실시기관 점검의 효율성을 강화하고, 임상시험의 품질 제고를 위해 위 방안을 마련했다. 차등 관리는 평가 점수가 양호한 순서에 따라 A, B, C 등급으로 나누어, 등급별로 점검횟수를 5년에 1회 점검(A등급), 3년에 1회 점검(B등급), 1년에 2회 점검(C등급)으로 관리하는 것이다. A등급은 행정처분이 없고 점검표상 시정 등이 5항목 이하인 곳이 해당되며, B등급은 점검표상 시정 등이 15항목 이하, C등급은 행정처분이 있거나 점검표상 시정 등이 15항목 초과인 곳이 해당된다. 식약청은 또한 선진 품질관리제도 도입을 위해 우수자체점검기관제를 시행하고, 임상시험수탁기관(CRO)의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 추진 (2. 5)

건보공단은 12년 발표한 공단 쇄신위원회 연구 결과에 포함된 진료비 심사 지급체계 합리화 방안의 실행을 위해 건강보험법 개정안 발의를 추진할 계획이다. 진료비 지급체계 개선안의 주요 내용은 보험급여 결정 권한과 책임의 조화, 진료비 청구·심사·지급체계 합리화, 급여사후관리역할 강화, 보장률 80%로 확대 방안 등이다. 건보공단은 현재 급여체계는 청구·심사·지급·사후관리 등 4가지로 구성되는데, 현재 공단이 할 수 있는 것은 지급밖에 없어, 나머지 기능들에 대해서도 공단의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공단은 이를 법제화하기 위해 올해 상반기 내 개정안 발의를 목표로 하고 있다. 건보공단은 보험자로서 심평원에 청구를 하기 전에 문제가 있는 청구건을 걸러낼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고, 현재 복지부 현지조사를 통해 급여 사후관리가 이루어지는 문제에 대해 공단이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심평원의 진료비 심사 업무가 공단이 실시하는 것보다 비효율적이라며, 청구 업무를 공단으로 이관해야 하는 당위성을 피력했다. 공단은 법 개정을 통해 요양기관이 공단으로 급여비를 청구하도록 하고, 수술 등 전문심사가 필요한 건은 공단이 전문심사기관(심평원)에 심사를 위탁하도록 하겠다는 계획이다. 공단은 심사와 지급 절차가 일원화되어 업무 효율화 및 재정절감을 달성할 것으로 기대한다.

○ 2012년 식품의약품안전청 총 670건 임상시험 승인 (2. 6)

12년 국내 식약청의 승인을 받은 의약품 임상시험은 총 670건으로, 11년 503건에 비해 33.2% 증가하였다. 국내 임상승인은 11년 309건에서 12년 367건으로 18.8%, 다국가 임상승인은 11년 194건에서 12년 303건으로 56%로 급증했다. 식약청은 임상시험이 늘어난 이유로 다국적 제약사 및 국내 제약사의 투자확대, 국내 임상시험 인프라 확대, 임상시험 관련 규정의 국제조화 등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종류별로 보면 화학물질 합성의약품이 486건, 유전자재조합의약품이 103건, 생물학적제제는 28건이었다. 치료영역 별로는 항암제 184건, 중추신경계 68건, 심혈관계 59건 등이었다. 이는 서구화된 식습관과 고령화 사회 등에 따른 국내 질병의 변화에 맞춘 특성을 고려하고 있다고 식약청은 설명했다. 임상단계별로는 1상이 160건, 2상이 105건, 3상이 227건, 연구자 임상이 172건이었다. 한편 지역별 임상실시 현황은 서울 55%, 경기도 14%를 차지해 지역편중 현상이 심하고, 주요 5대 병원의 임상시험 점유율이 35.3%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암환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기준 등에 관한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2. 6)

이는 암환자 의료비 지원기준에 대한 산정 기초자료인 13년 최저생계비, 재산액 및 건강보험료 부과액이 변경되어, 13년 소아·아동암 및 성인암환자 의료비 지원 대상의 기준을 개정하기 위한 것이다. 개정안은 우선 소득기준으로는 13년 최저생계비의 300% 이하, 재산기준으로 가구규모별·지역별 일반재산의 최고재산액(대도시기준)의 300% 이하가 지원 대상이다. 성인 암환자 및 폐암환자는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경우 보험료 85,000원 이하(13년 1월), 지역가입자는 89,000원 이하의 납부자가 대상이다.

○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 각종 복지공약들 후퇴 (2. 6)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박근혜 당선인의 의료분야 핵심공약인 4대 중증질환(암·심장·뇌혈관·희귀난치성질환)의 건강보험 보장률 강화 대상에서, ‘3대 비급여 항목’인 선택진료비·상급병실료·간병비를 제외하기로 하였다. 소득수준과 국민연금 가입 여부에 따라 선별적으로 차등화하는 기초연금 공약에 이어 핵심 복지공약들이 수정·후퇴하고 있다는 논란이 제기된다. 여권 관계자는 4대 중증질환 공약은 비급여로 보험에서 제외되었던 것을 급여로 포함시킨다는 것을 뜻한다며, 선택진료비나 상급병실료는 비급여 항목에 포함되지 않고 간병비는 원래부터 건강보험과 상관없는 것이라고 밝혔다. 3대 비급여 항목을 제외한 4대 중증질환 비급여 항목을 단계적으로 100%까지 지급하되, 공약대로 본인부담상한제를 적용시켜 소득수준에 따라 50만~500만원을 내도록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박근혜 당선인은 대선후보 TV토론과 인터뷰 등에서 4대 중증질환에 대한 보장은 국가 책임이며, 3대 비급여에 대해 점진적으로 보험적용을 확대하겠다고 밝힌바 있다. 인수위의 이러한 결정에 대해 각종 시민단체들은 이것이 명백한 말바꾸기이자 공약 철회라며 비판하고 있는 상황이다.

○ 서울행정법원, ‘손해배상금 대불시행 공고처분 취소소송’ 결정문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통지 (2. 7)

이는 병원 운영자 30명이 낸 취소소송에 대한 결정문으로, 보건의료기관개설자로 하여금 의료사고 대불비용을 부담하게 하는 것은 적법하되, 대불비용 부담액 등을 대통령령에 포괄위임한 것은 위법하다는 것이 요지이다. 법원은 결정문에서 대불비용 부담자 조항이 평등원칙과 자기책임의 원리에 반한다고 볼 수 없으며, 원천징수 조항이 과잉금지원칙에 반해 개설자의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리고 요양급여비용에서 대불비용을 원천징수하는 것은 대불비용의 확실한 확보를 위한 적절한 수단이며, 대불비용을 확보하고 징수비용을 절감함으로써 얻어지는 공익이 크다고 판시했다. 다만 대불비용 부과는 개설자의 재산권을 제한하는 행정작용으로 볼 수 있고, 대불비용의 부담액 등을 대통령령에 포괄적으로 위임한 것은 법률유보원칙에 위반된다고 결정했다. 법원은 부담액의 상한선만이라도 정하고 대통령령에 위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방향을 제시했다.

○ 문정림 의원, ‘의사 국가시험 제도 개선을 위한 의견 수렴 및 발전적 방향 마련을 위한 간담회’ 개최 (2. 7)

이는 1월 25일 제77회 의사 국가시험 필기시험 채점 착오 사건 이후, 의사 국가시험 제도 개선을 위해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과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학생협회 관계자가 7명이 양측 입장을 듣기 위해 마련되었다. 간담회에서는 의사 필기시험 채점 착오 관련 재발 방지 대책, 의사 실기시험 채점기준 공개 등에 관한 논의, 기타 의사 국가시험 관련 질의·응답 등의 주제를 논의하였다. 의대협은 실기시험 센터 등 인프라 구축, 비싼 응시수수료 (필기 및 실기시험 응시료 총 84만5,000원) 문제, 실기시험의 채점 기준 공개 및 채점 결과 열람 등의 요구도 국시원에 전달했다. 국시원은 재발 방지를 위해 시스템 전반에 대해 재점검을 하고, 제도개선이 적극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약속하겠다고 하였다. 한편 간담회를 주최한 문정림 의원은 1월 15일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법’을 발의해 국시원에 대한 예산 반영이 될 수 있는 근거 법령을 마련했다.

○ 대한의학회, ‘인턴제 폐지 경과와 NR 프로그램’ 발표 (2. 11)

이를 발표한 김재중 울산의대 교수는 우선 인턴제도가 각 과를 순환 근무하면서 과에 대한 특성을 익힐 수 있지만, 이를 통해 일차의료 현장에서 환자를 진료하는 역량을 키울 수는 없다고 말했다. 이는 의과대학 임상실습을 강화하고 개선하여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고, 인턴 없이 레지던트 수련을 시작하는 만큼 학과별 특성에 맞게 수련기간을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의대생들이 졸업과 동시에 레지던트가 되는 NR1 시기의 수련 프로그램에 대해서도 대비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즉 공통 수련 과정의 기간과 시기, 구체적인 학습과 수련 목표 등을 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더불어 인턴제가 폐지된 후 당분간 기존 인턴 수료자와 인턴을 하지 않은 졸업생 지원자들이 함께 전공의 선발에 지원하며, 이에 따른 관련 제반을 잘 조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정보시스템(범정부 복지정보연계시스템)' 개통 (2. 12)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은 복지사업 대상자와 수급이력 정보를 연계해, 정확한 복지대상자 선정을 토대로 수요자 중심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복지부는 12년 8월 11개 부처 198개 복지사업을 대상으로 1단계 시스템을 개통하였다. 2월 18일에는 16개 부처 296개 복지사업 정보를 연계하여, 개인별·가구별 복지서비스 이력관리, 중복·부적정 수급 방지, 중앙부처 복지사업 정보 제공, 복지사업 업무처리지원 등을 위한 시스템을 완전개통한다. 복지부는 이를 통해 복지서비스가 꼭 필요한 국민들에게 맞춤형으로 제공되는 기반을 조성하며,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 복지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상담하고 제공할 수 있게 되었다고 설명했다. 그리고 대상자 관리에 필요한 정보가 각 부처에 주기적으로 제공되어 복지재정 지출의 적정성을 제고할 수 있다고 밝혔다.

○ 50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 건강센터' 5곳 추가 개소 (2. 12)

근로자 건강센터는 50인 미만 소규모사업장의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작업관련성 질병 상담, 직무스트레스와 근무환경 상담, 건강진단 결과 사후관리, 근골격계 질환 및 뇌심혈관질환 예방 서비스 등의 활동을 한다. 여기에는 지역 내에 기반을 둔 대학병원 전문의와 간호사, 작업환경 전문가, 상담심리 전문가 등이 상주한다. 이는 소규모 사업장에서 업무상 재해가 발생하는 비율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산업보건 관련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현실을 반영한 것이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지난해부터 인천·시흥·광주·대구·창원 등 5곳에 근로자건강센터를 운영했고, 오는 3~4월에는 서울(구로)·울산·성남·천안·부천 등 5곳에 추가로 문을 열 예정이다.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재정절감 효과분석 결과 발표 (2. 13)

심평원은 기자설명회를 통해 서울대학교 김진현 교수가 진행한 2012년 심평원 업무를 통한 재정절감 효과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심평원은 의료의 적정성 확보를 위한 적정급여 자율개선, 외래처방 인센티브를 통한 약제비 관리, 수가개선 및 청구진료비 심사 효율화, 의료자원·의약품 관리 등 정부정책지원을 통해 약 2조1,500억원의 건강보험재정을 절감했다고 발표했다. 덧붙여 지표연동관리제도 효과분석이 더해지면 건강보험 재정절감 효과는 더 늘어난다고 주장했다. 재정절감분석은 연도별 청구진료비 내역을 중심으로 사전예방 7개 항목과 심사조정, 그리고 사후관리 9개 항목을 검토했다. 세부적으로 약가 인하로 7,420억원, 심사조정으로 3,486억원, 적정급여 자율개선으로 2,799억원, 기등재 의약품 목록정비로 2,488억원을 절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심평원은 예방과 자율에 의한 진료행태 개선 유도과 진료비 심사의 과학화·효율화의 효과가 크게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또한 진료 적정성 평가 및 평가대상 적용 확대를 통해 항생제 사용량 감소와 주사제 처방률 감소 등 진료행태 개선 효과가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 치은염 환자 800만명, 연 7.3% 증가 (2. 13)

건보공단은 최근 6년(06~11년) 동안 치은염 질환 건강보험 진료비 지급자료를 분석한 결과, 총 진료인원은 06년 563만명에서 11년 800만명으로 늘어났다. 남성은 06년 285만명에서 11년 401만명으로 연평균 7.0% 증가했고, 여성은 06년 278만명에서 11년 399만명으로 연평균 7.5%씩 늘었다. 치은염 질환으로 진료를 받은 환자의 건강보험 진료비는 06년 2,776억원에서 11년 4,881억원으로 연평균 11.9% 증가했다.

11년 전체 수검자 413만명 중 치석제거가 필요한 경우는 208만명, 치아우식증 치료가 필요한 경우는 95만명, 치주질환 치료가 필요한 경우는 37만명으로 나타났다. 한편 정부는 올해 7월부터 치석제거만으로도 치료가 완료되는 간단치석 제거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할 예정이다.

○ 보건복지부, 응급의료기본계획안 확정 (2. 13)

복지부는 1차 중앙응급의료위원회를 개최하여 응급의료기본계획안을 확정하고, 1조원의 응급의료기금을 투입하기로 하였다. 주요 투자 분야는 응급처치 교육·홍보(450억원), 농어촌 응급의료 지원(1,700억원), 중증응급질환 치료역량 확충(3,750억원), 응급환자이송 안전성·전문성 강화(2,150억원), 응급환자 미수급 대지급 등 기타 사업(1,470억원) 등이다. 이를 통해 17년까지 예방 가능한 외상사망률 20% 미만, 심정지 생존퇴원률 8.2% 이상, 중증응급환자 적정시간 내 최종치료기관 도착비율 60% 이상으로 하는 등의 구체적인 목표를 세웠다. 또 현장-이송-병원치료 단계별로 총 48개 세부실행과제를 마련해 시행할 계획이다.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2013년도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계획 공개 (2. 14)

심평원은 대장암·당뇨병 등 6개 영역 21개 항목에 대해 의료의 질을 평가해 왔으며, 13년에는 7개 영역 29개 항목을 평가한다. 새로 추진되는 평가는 폐암·천식·경피적관상동맥중재술 등이며, 7개 질병군 포괄수가 적용진료의 적정성 보장을 위해 포괄수가영역의 평가를 시작한다. 올해 예비평가 항목은 위암·간암·만성폐색성폐질환·7개 질병군 포괄수가(종합병원이상)·일반질지표(상급종합병원) 등이다. 심평원은 암환자 증가 추세와 인구 고령화현상 등을 반영하여 12년에 이어 암질환 평가와 만성질환 평가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암질환 평가는 대장암과 유방암에 이어 올해에는 폐암을 평가하고, 14년에는 위암과 간암을 추가할 예정이다. 만성질환평가는 외래영역에 대한 평가로 고혈압·당뇨병에 이어 올해는 천식 상병에 대한 본 평가와 만성폐색성폐질환에 대한 예비평가로 확대할 예정이다. 가감지급은 12년 6개 항목에서 13년 10개 평가항목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 '서남의대 학생교육권 보호를 위한 정책 간담회' 개최 (2. 14)

박종천 서남대학교 의과대학 학장은 서남의대 정상화 방안을 발표하였다. 발표를 통해 이번 교과부의 감사 처분은 의과대학 임상실습의 본질에 대한 오해에 따른 것이며, 졸업생 및 재학생들의 학점 및 학위취소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교육과정 개편 작업의 1단계를 완료하여 통합강의의 기틀을 만들었으며, 12학년도 이수 학생의 교과 이수 누락이 발생되지 않도록 한시적인 교과 편성을 배정했다고 말했다. 그리고 타 대학과 비교해 현저히 적은 기초의학 교원의 충원을 약속하고, 2학기부터는 협력병원인 전주 예수병원의 임상 전문의 중 몇 명을 서남대 의대 전임교원으로 임용해 이론과 실습의 연속성과 질적 향상을 도모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하지만 토론에 참석한 패널리들은 정상화 방안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를 제기했다. 우선 기존 의대에서는 납득하기 어려운 기초의학 및 임상실습 시간표 구성, 수련병원 평가 과정에서 허위로 자료를 제출하였던 것부터 문제삼았다. 또한 제대로 된 교육환경이 먼저 구축되어야 하고, 서남의대 교육과정을 모니터링 할 수 있는 별도의 전담기구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기도 하였다. 한편 남기훈 의대협 의장은 교과부의 조치가 근본적으로 잘못되었다고 비판하였다.

○ 업무상 질병 기준 확대 '산재보험법·근로기준법 시행령 개정안' 마련 (2. 14)

고용노동부는 위 개정안을 2월 말까지 입법예고하고 올해 상반기 중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난 82년 노동부 예규로 업무상 질병 기준을 마련한 후 30년 만에 노사정 TF를 만들어 대폭 개정하는 것이다. 현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인정하고 있는 직업성 암은 폐암·간암·백혈병·피부암 등 9종에 불과했지만, 개정안에서는 위암·대장암·유방암·갑상샘암·식도암·신장암·뼈암·방광암 등 12종이 추가 지정됐다. 위암은 남성 암발병률 1위, 갑상샘암은 여성 발병률 1위를 차지하는 흔한 암이다. 새로 추가된 직업성 암 유발물질 14종에는 삼성반도체 백혈병 등을 일으킨 물질로 알려진 포름알데히드와 엑스선 및 감마선이 포함됐다. 그동안 질병기준에는 빠져 있던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도 처음으로 업무상 정신질환에 포

함돼 산재로 인정받게 됐다. 만성과로 판정은 '12주간 주당 평균 60시간 초과' 기준을 신설해, 상시적으로 장시간 근로에 시달리는 노동자들이 만성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했다. 현재는 '발병 전 3개월 이상 연속적으로 일상적 업무에 비해 과중한 육체적·정신적 부담이 발생한 경우'를 기준으로 삼고 있어 일상적으로 장시간 일하는 노동자들은 만성과로 인정받지 못했다. 호흡기 질환 중에는 그동안 업무상 질병에 포함되지 않았던 만성폐쇄성폐질환이 추가 지정되었다. 호흡기계 질병을 유발하는 물질로 밀가루, 곡물분진, 포름알데히드 등 14종도 추가될 예정이다. 지난해 구미에 이어 화성 삼성공장 불산(불화수소) 누출 사고로 유해성 논란이 커지고 있는 불산도 급성중독을 일으키는 화학물질로 지정됐다.

○ 간호조무사 제도, 2018년 폐지 (2. 14)

복지부는 제4차 보건의료직능발전위원회를 개최하고 '간호인력 3단계 개편 방안'을 제시했다. 개편 방안에 따르면 간호조무사 제도는 오는 18년까지 폐지되며, '간호사-간호조무사'로 구분하고 있는 현재의 간호인력 체계는 '간호사-1급 실무간호인력-2급 실무간호인력(가칭)'으로 나눈 3단계 인력체계로 바뀐다. '간호사'는 대학 4년의 교육·실습을 받은 자, '1급 실무간호인력'은 대학 2년의 교육·실습을 받은 자, '2급 실무간호인력'은 간호특성화 고등학교 또는 고등학교 졸업자 중 복지부장관이 지정한 교육기관에서 소정의 교육을 마친 자로 정의된다. 복지부는 간호인력 양성 교육과정에 대해 평가·인증 시스템을 운영하여, 간호조무사 학위를 포함한 모든 간호인력 교육기관을 관리·감독한다. 이를 통해 일정기간 이상의 경력을 인정해 높은 단계로 상승할 수 있는 '경력상승체계'가 가능하며, 교육과 시험을 통해 자격을 부여하게 된다. 회의에 참석한 대한간호조무사협회와 대한병원협회는 찬성의 입장을 밝혔으며, 간호사협회는 경력상승체계에 대해 반대하는 입장을 보였다.

○ 국회의원 12명,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동발의 (2. 15)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동익 의원 등 12명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의 정부조직개편안에 국민복지 향상 의사가 보이지 않는다고 개정안을 발의했다. 박근혜 당선인의 주요 공약이었던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를 실현하기 위한 조치가 눈에 띄지 않으며, 기획재정부장관이 겸임하는 경제부총리제를 도입해 재정 통제를 강조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경제부총리와 함께 복지부장관이 겸임하는 사회부총리를 두어, 경제와 복지를 총괄하는 양 날개로서 상호 선순환구조를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사회부총리는 여성가족부와 보건복지부에 나누어 있는 아동청소년정책, 교육부와 복지부에 나누어 있는 영유아 보육정책, 각종 부처에 나누어 있는 보건의료정책에 대한 조정자 역할을 수행한다. 그리고 비정규직 등 노동문제, 교육문제, 주거문제 등 각종 민생문제 해결을 위한 리더십을 구축해야 한다고 발의 의원들은 주장했다. 개정안은 보건의료와 사회복지의 정책총괄조정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에 2차관제를 도입하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2. 보건의료산업/기술

○ 서울대학교암병원, '암 연구협력 네트워크 시스템' 정식 개시 (2. 1)

이는 암 치료에 관한 기초과학과 임상의학 연구자 간에 연구협력 및 공동연구를 활성화하기 위한 것이다. 서울대암병원은 기초과학과 임상의학 두 분야의 공동연구를 실질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암 연구협력 네트워크 시스템(Center for Cancer Research Collaboration, CCRC)을 구축해 왔다. 네트워크 시스템에는 서울대암병원, 서울대의대 기초교실, 서울대 생명과학부, BIO-MAX, KIST, POSTECH의 연구자 등 총 145명이 참여하고 있다. 그리고 1,000개 이상의 암 연구 관심 키워드, 4,000개 이상의 논문, 6만건 이상의 논문 키워드, 1만개 이상의 암 관련 조직 및 혈액 자원 등이 DB화 되어있다. 이를 바탕으로 참여 연구자들이 각종 키워드를 검색 및 조회할 수 있고, 매칭 기능을 이용해 적절한 공동 연구자를 찾을 수도 있다. 또한 네트워크 시스템을 통해 공동연구를 진행하면, 연구에 필요한 인체자원 이용에 대한 지원

을 받을 수 있다. 한편 암 연구협력 네트워크 시스템은 서울대병원에서 추진 중인 연구중심병원의 산학연 공동연구 인프라 부분에 포함되기도 했다.

○ 2012년 12월 의약품 시장 동향 (2. 3)

지난해 12월 의약품 내수 지수는 전년 동월 대비 10.7% 증가한 150.3, 수출 출하지수는 전년 동월 대비 33.0% 증가한 312를 기록했다. 의약품 판매액 지수와 소비자 물가지수는 모두 감소했다. 의약품 도소매 판매액은 7,452억원으로 전년 동월 대비 8% 감소했고, 의약품 판매액 지수는 전년 동월 대비 4.5%, 의약품 소비자 물가 지수도 전년 동월 대비 3.8% 하락했다. 의약품 수입액은 4억1,218만 달러로 전년 동월 대비 28% 증가한 수치를 나타냈다. 이렇게 의약품 시장이 단기 급등한 것은 차기 정부의 제약산업 육성 정책에 대한 기대감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 미국 제약사 '일라이 릴리', PACE 암 인식 지수 조사 결과 발표 (2. 4)

이번 조사는 12년 8월부터 10월까지 미국·프랑스·독일·이탈리아·일본·영국 등 6개국에서, 암환자·보호자·일반인 총 4,341명을 대상으로 실시되었다. 조사 대상 10명 중 6명은 지난 20년간 암 퇴치에서 이루어낸 발전에 만족한다고 응답했으나, 프랑스를 제외한 국가들의 대다수 사람들은 자국이 암 퇴치에 너무 적게 투자한다고 응답했다. 상당수의 환자들은 새로운 암 치료제를 이용하게 되기까지 너무 오래 걸린다고 답했으며, 일본을 제외한 모든 국가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려운 경제상황 때문에 암 연구 진행이 늦추어진다고 답했다. 응답자 10명 중 6명은 암 치료제를 개발하는 제약사들이 암의 완치보다는 암의 일시적인 치료에 더 관심을 기울인다고 생각했다. 응답자의 70% 이상은 환자들에게 임상시험에 참여할 기회가 좀 더 많이 필요하다고 응답했고, 90%의 응답자는 암 연구 및 치료의 향상을 위해 의료 기록을 공유하는데 동의했다

○ 서울대학교암병원-미국 국립암연구원(National Cancer Institute), 연구 협력을 위한 MOU 체결 (2. 5)

이번 협약을 통해 미국 국립암연구원의 중앙임상단백체연구부(Office of Cancer Clinical Proteomics Research)와 서울대암병원은 중앙 유전단백체 연구 및 임상 단백질 연구기술 공동 개발 및 상호 교류 협력에 힘쓸 예정이다. 주요 내용은 서울대학교병원의 임상연구실험실을 위한 단백질학 기술 및 규격·연구 설계에 대한 기술 개발 및 적용에서 새로운 공의 협력 체계 구축, 암 관련 타겟 단백질·임상 시료·연구 자료 및 결과물의 공유 등이다. 중앙임상단백체연구부는 임상단백체학 기술과 연구 설계, 자료 획득 및 제공, 시약과 표준 시료 개발 등의 업무를 하는 부서이다. 양 기관은 공동 개발한 임상단백체기술을 이용한 암의 진단·예후·치료 평가에 대한 테스트와 결과 해석에 대한 업무가 원활히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 서우-중대지산 컨소시엄과 제주헬스케어타운 투자 합의각서(MOA) 체결 (2. 6)

합의각서의 내용에 따르면 서우 컨소시엄은 헬스케어타운의 총 153만9,000㎡의 면적 중, 메디컬 파크 부지 내 약17만8,000㎡ 부지에 4,500억원을 투입한다. 이를 통해 휴양·재활 전문병원, 요양원, 국제휴양체류시설 등을 개발하고, 연내 사업추진을 전담할 특수목적법인(SPC)를 설립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JDC는 12년 10월 중국 녹지그룹과 1조원 규모의 투자계약을 체결했으며, 현재 타운 내 의료 R&D센터, 휴양문화시설, 숙박시설 등의 건축공사가 진행되고 있다. 제주헬스케어타운 조성사업은 국토해양부와 주관하고 JDC가 시행하며, 의료 기술과 제주 천혜의 자연환경을 연계한 글로벌 의료복합단지를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를 통해 1조8,000억원의 생산유발효과, 4,400억원의 소득유발효과, 약 2만명 이상의 고용창출을 전망하고 있다.

○ 의약품 유통산업 발전을 위한 공제조합 설립 정책토론회 (2. 6)

이 자리는 도매업계를 중심으로 중소도매업체를 위해 공제조합을 설립해 담보 부담을 줄여줘야 한다는

의견들을 국회 차원에서 공론화하기 위해, 보건복지위원회 민주당 이학영 의원 주축로 마련됐다. 이학영 의원은 의약품 유통산업의 문제점에 대해서 공감하면서, 의약품 유통서비스와 같은 공공서비스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보건복지위원회 오제세 위원장 역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하여 공제조합을 설립해 위기 상황을 돌파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의약품 공제조합은 조합원인 의약품 도매업체들이 공동으로 일정한 부담금을 모으고, 이들 중 일정한 공제사유가 발생했을 때 공동으로 조성한 재산을 운영하여 자금대여·보증·투자를 하는 조직체이다.

법무법인 LK파트너스 고한경 변호사는 의약품 도매거래를 통해 의약품 수요와 공급을 적정하게 조절하고 건강보험 재정 건실화에 기여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일괄약가인하와 리베이트로 인한 제약사의 수익성 하락으로 도매업체의 마진율도 축소하고 있고, 시장구도가 개편되며 영세업체들의 사업기반 붕괴가 우려된다고 말했다. 그 대안으로 공제조합 설립이 필요하며, 업체 스스로 자생력을 키우고 정부가 유통공제조합을 설립하는 등 특별한 지원방안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성균관대 이재현 약대 교수는 의약품 공제조합 설립을 입법화하기 위해서는, 약사법과는 별도의 특별법 제정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는 제약산업 지원 관련 법안에서, 제약산업을 의약품을 유통하는 것과 관련된 산업으로 정의하고 있기 때문이다. 복지부는 의약품 공제조합 설립 및 취지에 대해서는 공감하지만, 구체화시키기 위해서는 좀 더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 한국 연구자, 루푸스 발병 관여 유전자 세계 첫 발견 (2. 13)

한양대학교 류마티스병원의 배상철 교수는 다국적 연구 프로젝트를 통해 루푸스의 발병에 관여하는 유전자 'ICAM1'을 세계 최초로 발견했다. 루푸스는 면역체계에 이상이 생겨 자기 몸을 스스로 파괴하여 유발되는 자가면역질환으로, 피부·관절·뇌·신장·심장·폐 등 몸의 모든 부위를 공격한다. 루푸스는 천의 얼굴을 가진 병이라고 일컬어지며, 발병원인은 환경적 요인과 함께 다수의 유전자 변이가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친다. 연구진은 한국인과 미국·유럽 등에 거주하는 백인종·흑인종·히스패닉 인종으로 구성된 17,481명의 루푸스 환자와 정상대조군의 ICAM1 유전자 서열을 분석했다. 분석 결과 ICAM1의 특정 유전변이가 분석된 모든 인종에서 루푸스의 발병에 관여함을 확인해, 높은 신뢰 수준을 가진 루푸스 위험 유전변이를 규명할 수 있었다. ICAM1 유전자는 세포간의 접합에 관여하는 단백질을 생성하는데, 루푸스 환자에게서 ICAM1이 실제로 높은 수준으로 발현된다.

○ 일본, 로봇사용 재활 임상 시험 실시 예정 (2. 4)

로봇을 사용하여 신경이나 근육 분야 난치병 환자의 재활 효과를 측정하는 세계 최초의 임상시험이 실시된다. 의료기기 양성을 목표로 한 이번 시험은 일본국립니가타병원을 비롯하여 도쿄·오사카 등 전국 10개 병원에서 3월부터 순차적으로 시작된다. 시험에는 '로봇 슈트 HAL'이 사용되며, 신경과 근육 분야 난치병으로 보행이 불안정한 18세 이상 30명을 대상으로 한다. 이 시험에서는 로봇을 장착했을 때와 장착하지 않았을 때 보행기능 회복 차이 등을 조사한다.

○ 보건복지부, 의료기기산업 특성화대학원 지원 공고 발표 (2. 14)

복지부는 오는 3월 15일까지 지원대학을 모집하여 4월 초 대학 선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이는 국내 의료기기산업에 특화된 글로벌 전문 인력을 체계적으로 양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의공학·의학·경영·법학 등 다학제간 융합지식과 실무 경험 등을 갖춘 석사급 인력양성이 목표이다. 정부는 올해 최대 3억원을 투입해 하반기부터 1개 대학을 선정하여 운영할 계획이며, 16년까지 매년 재정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대학 선정 평가기준은 산업체 수요에 맞는 교과과정 설계에 주안점을 두고, 선정 대학과 의료기기 기업을 연계해 기업 맞춤형 커리큘럼 운영과 졸업생의 해당 기업 취업이 보장되는 계약학과 방식으로 발전시킬 계획이다.

3. 제약업계

○ 미국 환자, 화이자 항우울제 ‘졸로프트(Zoloft)’ 약효 관련 소송 (2. 1)

미국 법원에 소송을 낸 로라 A. 플럼리라는 환자는 졸로프트로 지난 3년 동안 치료를 받았으나 도움이 되지 않았고, 가짜 약에 쓴 비용을 돌려달라고 주장했다고 AP통신 등이 보도했다. 이에 대해 화이자는 그동안 임상연구 및 수백만 환자들의 사용 결과, 졸로프트가 우울증 치료에 효과적이라는 사실을 증명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AP통신은 제약사가 대중으로부터 약의 위해요소를 숨기거나, 승인되지 않은 질환에 사용하도록 부추기는 마케팅을 하는 등의 행위로 불신을 사고 있다고 설명했다. 통신은 약효가 나타나지 않아 환자가 자신이 쓴 비용을 되돌려 받아야겠다는 주장을 하는 소송은 처음일 것이라고 보도했다.

○ 공정거래위원회, 한국제약협회에 과징금 5억원 부과 및 검찰 고발 결정 (2. 1)

공정위는 제약협회가 회원사들로 하여금 한국보훈복지공단 의약품 입찰에서 저가로 낙찰 받은 도매상에게 의약품을 공급하지 못하도록 한데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5억원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제약협회의 결정이 의약품 유통시장의 경쟁을 제한하고 약가인하를 저하해 환자 및 건강보험재정의 부담을 증가시켰고, 의약품 도매상들과 보훈병원에 손해를 가져왔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1원 낙찰이 정책상 문제가 있는 행위라고 하여도 제약협회의 범위반 사유가 될 수 없으며, 1원 낙찰이 부당업체·병원의 거래상 지위남용·차별적 취급 등 불공정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저가입찰을 통해 경쟁사업자가 배제되었거나 배제될 우려가 있어야 하지만 그렇지 않고, 보훈병원이 거래상 지위를 남용해 1원 낙찰을 강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이에 제약협회는 공정위의 결정에 유감을 표명하며, 불공정한 거래관행을 근절하고 투명한 의약품 유통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가 1원 낙찰이라고 밝혔다. 그리고 추후 공정위에서 규정한 사업자단체 활동지침을 준수할 방침이 되, 불공정거래행위와 리베이트의 온상이 되고 있는 1원 낙찰 실태를 개선하기 위한 자정활동 및 제도개선은 지속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적격심사제’의 조기도입을 복지부와 기획재정부에 건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복지부도 1일 보도자료를 통해 1원 낙찰은 바람직하지 않은 거래 관행이라고 밝히며, 공공병원의 의약품 입찰 구매시 적격심사제를 확대 적용하여 1원 낙찰을 근절시키겠다고 밝혔다. 적격심사 낙찰제는 입찰자의 계약이행 능력을 심사해, 입찰가격이 적정하고 일정수준 이상 평점을 받은 우량업체를 낙찰자로 정하는 제도이다. 이를 통해 예정가격의 79~97% 범위 내에서 입찰해야 낙찰이 가능하다. 지방의료원(34개소) 및 적십자병원(5개소) 대상의 ‘지역거점 공공병원 운영평가’시, 적격심사제 적용 기관에 가점을 부여해 의료기관 기능보강 예산 지원과 연계할 계획이다. 제약협회도 복지부가 추진하는 적격심사제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겠다고 밝혔다.

○ 노바티스 종합감기약 ‘트리아미니크(Triaminic)’, ‘테라플루(Theraflu)’ 시럽 리콜 (2. 4)

미국소비자제품안전위원회는 이들 제품의 소아용 안전 캡 일부에 결함이 있을 수 있다고 설명하면서, 어린이가 변조방지플라스틱을 제거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현재까지 어린이가 캡을 연 경우가 4건이 발생해 한 아이는 치료가 필요하며, 유사한 8건도 보고되었다. 이들 시럽은 아세트아미노펜이 포함되어 있어 다량 섭취하면 간손상 또는 장애를 일으키고, 발작 및 심장박동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 제조사인 노바티스는 미국 내에서 유통 중인 테라플루 6종과 트리아미니크 183종을 회수하고 있다고 밝혔다.

○ 한국민주제약노동조합, 8개 지부 및 제약사에 임담협 및 상견례 요청 공문 발송 (2. 4)

한국민주제약노동조합은 다국적제약사들의 산별노조로 지난 해 12월 출범하였다. 김상찬 위원장은 상견례를 갖자는 공문을 정식으로 발송해 2월 안에 8개 지부의 상견례를 모두 마무리 지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상찬 위원장은 사용자측의 반응도 예상보다 긍정적이며, 노조의 입장을 밝히고 상생을 제안하니 이해했다고 말했다.

○ '리베이트 쌍벌제도의 합리적인 개선방안' 정책토론회 (2. 6)

현두륜 법무법인 세승 변호사는 의약품 리베이트는 영업활동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수단인 만큼 근본적으로 없애는 것이 불가능하며, 불법 리베이트는 의약품 정책의 잘못에서 비롯된 만큼 정책적인 배려도 따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리베이트 쌍벌제 적용의 합리적 개선방안으로 위탁감사에서 쌍벌제 확대 적용, 예외적 허용사유의 확대, 위법성에 부당성과 대가성 요건 추가 등을 제시했다. 특히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리베이트 범위를 확대해 정당한 학술활동 등을 제약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고 주장했으며, 구체적인 대가성과 부당성 여부를 묻지 않고 처벌하고 있는 현실을 고쳐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리고 자격정지 기준을 수수액 기준으로 변동하고, 행정처분을 경감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복지부에서 리베이트 불법성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 기획재정부와 보건복지부, 신성장동력분야에 임상 1·2상과 백신 개발 등 포함 (2. 7)

이들 부처는 최근 조세특례제 개정을 위한 회의를 갖고, 신성장동력분야에 임상 1·2상과 백신 개발 등 제약분야를 포함하기로 결정했다. 시행령 개정은 오는 2월 마무리될 예정이며, 개정이 완료되면 올해부터 적용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기존 조세특례 대상은 유전자치료제·항체 치료제·줄기세포를 이용한 치료제·바이오시밀러 등이었고, 화합물의약품은 후보물질발굴 단계에서만 세제 우대혜택을 받을 수 있었다. 이번 개정안으로 임상시험에서 대기업은 20%, 중소기업은 30%의 세제 우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새롭게 포함되는 임상시험비용도 투자대비 20~30%까지 세제 우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시행령 개정은 제약사 임상시험 비용 부담에 대해 정부측도 공감대를 형성해 마련된 것으로, 향후 임상 3상 지원도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 약가인하 후 6개월 약품비 9,086억원 절감 (2. 7)

복지부와 심평원은 12년 4월 약가인하 이후 6개월간 건강보험 약품비 청구금액을 모니터링한 결과, 총 약품비는 6조1,08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7.1% 감소했다고 밝혔다. 약가인하가 없었다면 해당 기간의 약품비 청구금액은 7조166억원이며, 이에 따른 6개월간 절감액은 9,086억원이 절감된 것이라고 추정했다. 건강보험재정 6,360억원, 본인부담금 2,726억원이 줄어든 것이고, 총진료비 중 약품비 비중은 26.4%로 전년 동기 대비 2.9% 감소했다. 한편 애초 우려했던 복제약의 오리지널약으로의 처방 전환은, 6월과 7월에 조금씩 증가하다가 8월과 9월에는 오히려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다. 처방량 및 청구량 기준으로도 큰 변화가 없었고, 국내사와 다국적제약사의 청구액 변화 비교에서도 변화추이를 찾기 어려웠다. 복지부는 향후 사용량 약가인하 연동제, 진료비 가감지급사업 등을 개선하여 약품비 사후관리를 강화하는 방안을 3~4월 중에 발표하고, 7월경에 시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 한국제약협회, 보건복지부에 '의약품 안정 공급 및 유통 투명화를 위한 건의문' 제출 (2. 11)

건의문은 1원 낙찰을 근절할 수 있는 방안을 담은 것으로, 원외처방리스트 복수화, 기초필수약 가격경쟁 지양, 국공립병원 입찰 물량(발주량) 홈페이지 공개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원외 처방약제리스트 복수화'는 병원 약제위원회에서 동일성분의 다수 품목을 선정할 경우, 외래처방 리스트에 모든 품목을 등재하는 것이다. 제약협회는 이를 통해 원외 시장 확보를 위한 무분별한 초저가 투찰이 줄어드는 대신, 약사위원회 처방리스트에 등재시키기 위한 제약기업간 품질경쟁이 활발해 질 것으로 기대했다. '기초필수약품의 가격경쟁 지양'은 정부가 정한 퇴장방지의약품과 저가의약품 및 희귀의약품 등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의약품에 대해, 과도한 저가 낙찰이 일어나지 않도록 입찰 방법과 조건을 달리하는 것이다. 홈페이지 공개는 병원 홈페이지에 의약품별 실질 발주량을 공개해, 낙찰 도매업소와 제약회사 간의 거래에서 나타나는 입찰 물량 왜곡 현상을 차단하자는 취지이다.

○ 기획재정부, 보건복지부 건의 '제약산업 세제 지원 확대 방안' 미반영 (2. 11)

복지부와 국무총리실 주재의 신성장동력지원협의회는 최근 회의를 통해 개량신약, 천연물의약품 개발

비용도 세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방안들을 정부에 건의했다. 이에 11일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기재부는 새정부가 세제감면 축소 정책을 펼 계획이라고 밝히며, 복지부가 건의한 제약산업 세제 지원 확대 방안을 반영하기 곤란하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13년 세법개정안에 제약분야에 대한 충분한 세제 우대가 반영되어 있다는 점, 타산업과의 형평성 문제, 신정부정책(세제감면 축소)과 배치된다는 이유에서다. 그리고 제약분야에 백신과 화합물의약품의 임상1·2상 세제지원도 확대됨에 따라 세제 지원의 균형을 확보했다는 것이 기재부의 주장이다. 기재부는 조세특례법상 세제지원을 향후 5년간 절반으로 축소할 계획이라며, 신성장동력분야 등 대기업 위주 지원조항은 향후 우선 축소 대상이라고 밝혔다.

○ 2012년 제네릭 생동성 승인 201건 (2. 12)

식약청은 생물학적 동등성시험 승인현황을 분석하여, 12년 제네릭 의약품의 생물학적 동등성시험 승인 건수는 201건으로 11년 292건에 비해 감소했다고 밝혔다. 식약청은 11년 말부터 1개의 제약사가 시행한 생물학적 동등성시험결과를 다른 제약사에서 활용할 수 있는 공동생동 및 위탁생동이 허용되며 감소경향이 나타났다고 분석했다. 세부 항목을 보면 고혈압 등 심혈관계 의약품, 정신신경계 의약품 및 소화계 의약품 개발에 집중되었다. 심혈관계의약품은 82건, 신경계의약품 36건, 소화계의약품 28건이며, 골다공증치료제와 같은 대사성의약품은 12건이었다. 성분별로는 고혈압치료제가 66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특히 복합제가 48건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 보건복지부, 리베이트 약가연동제 대대적인 개정 착수 (2. 12)

최근 복지부는 철원 리베이트 사건에 연루된 리베이트 약가연동제 항소심에서 잇따라 패소하면서, 리베이트 연동제에 대한 대대적인 제도 정비에 착수했다. 7개 제약사가 연루된 이 사건에서 법원은 대표성을 이유로 제약사들의 손을 들어주었고, 복지부는 상고를 포기하며 지난해 연말 이후 리베이트 약가연동제의 집행을 미루고 있다. 복지부는 제도보완과 관련하여 대표성과 비례원칙을 확보하기 위한 연구를 진행 중이고, 리베이트가 적발되면 급여목록에서 삭제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

○ 국민건강보험공단, '약가협상 및 약품비 관리제도 발전방향' 연구용역 공고 (2. 14)

이번 연구용역은 약가협상 업무와 의약품관련제도들의 문제점을 짚어보고 보완책을 마련하는 것이 목적이다. 공단은 약가협상을 비롯하여 현재 운영되고 있는 약가사후관리 제도 및 사용량 관리제도 등 다수의 약품비 관리제도에 대해서도 연구를 의뢰했다. 이번 연구는 제도 평가를 비롯하여 협상 업무 능력과 약가 제도 개선에 활용하기 위한 것이다. 연구내용은 약가협상제도 평가 및 발전방향, 현행 약품비 관리제도 평가 및 발전방향, 효율적인 약품비 관리를 위한 공단의 역할 개발 및 실무 적용방안 등 크게 3가지로 나뉜다. 특히 현행 약품비 관리제도 분석은 리베이트 약가연동제·실거래가상한제·기등제약 목록 정비 등 타 기관에서 맡고 있는 약품비 관리제도까지 평가하게 된다. 이는 공단이 의약품 관리에 적극적으로 나서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 보건복지부, 제약 R&D 투자 세금감면 확대 (2. 15)

이는 15일 개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이 발효된데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법인세액 공제율이 상향 적용되는 대상에는 백신, 화합물 신약 임상 1·2상, 혁신형 개량신약이 추가된다. 법인세액 공제율은 중소기업의 경우 25%에서 30%, 대기업의 경우 3~15%에서 20%로 변경된다. 복지부는 이번 세금감면으로 기업들이 올해 340억 수준의 절감 효과를 볼 수 있을 거라고 기대했다. 또 기업이 R&D 투자를 확대함에 따라 세금감면도 비례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며, 복지부는 장기·저리의 정책 용자 및 공공투자펀드의 지원도 대폭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 한국의약품도매협회, 공정거래위원회 1원 낙찰 시정 명령에 유감 표시 (2. 15)

도매협회는 공정위의 시정 명령이, 초저가 낙찰 및 구입가 미만 판매 등의 약품공급 문제를 정당화시키는 것으로 오해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리고 초저가 낙찰 의약품에 대한 조속한 약가 사후관리 포함,

저가낙찰 유인이 되는 시장형실거래가 제도 폐지, 입찰 주체인 의료기관의 적정 약가산정 및 원외코드 확대 등의 개선을 지속적으로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가 1원 낙찰 근절을 위한 사후관리에 강력히 나서고, 제약협회 등 관련 단체와 지속적인 공조체제를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4. 의업단체

○ 대한병원협회, 전문병원 환자분류기준 변경 관련 재검토 촉구 (2. 4)

심평원이 연세대 예방의학교실 박은철 교수에 의뢰해 수행한 '전문병원 지정 및 평가 개선연구'에서는, KDRG(한국 입원환자 분류체계) 질병군을 바탕으로 각각 질환과 진료과목에 부합하는 질병군 재분류를 새로운 전문병원 지정기준으로 제시했다. 이는 그동안 환자구성비율의 산정을 위해 MDC(주요진단범위)를 사용했지만, 각 질환과 진료과목이 제대로 부합되지 않는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이다. 이에 병협은 KDRG가 현재 개정작업에 있는 만큼 전문병원의 환자분류기준으로 활용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고 밝혔다. 또한 수련병원 가산점수 부여 등의 인센티브 제공 방안에 대해서는 최소 3%에서 최대 5%까지 부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전문병원별 3억원 수준의 R&D를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의료인력 기준 및 중증도가 높은 뇌혈관·심장·관절·척추수술 관련 분야의 병상기준은 현행대로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대한의사협회·대한의학회, 의약품 리베이트 단절 선언 (2. 4)

이들은 의협회관에서 '의약품 리베이트에 관한 의료계 기자회견'을 가지고, 리베이트 관행을 없애기 위한 방침을 발표했다. 노환규 의협 회장은 의약품 리베이트가 계속되는 이유로 정부의 높은 약가 정책, 국내 제약사들의 관행, 정부의 낮은 의료수가 정책 등을 뽑았다. 노환규 회장은 의사들이 스스로 리베이트 수수를 중단할 것을 촉구하며, 향후 자체적인 윤리규정을 마련해 내부단속을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리고 제약사들이 일체의 의약품 리베이트 공세를 중단해야 한다고 하며, 리베이트가 지속되면 약가인하 뿐만 아니라 해당 품목의 허가취소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특히 리베이트 쌍벌제 모범 및 하위 법령이 개선될 때까지 영업사원의 의료기관 출입을 금지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리베이트 쌍벌제는 제약사의 정당한 마케팅과 의사들의 정당한 연구참여까지 과도하게 금지하여, 모든 의사들을 잠재적인 범죄자로 규정한다는 것이다. 이에 규정이 개선되기 전까지 제약회사 영업사원의 의료기관에 대한 출입을 일체 금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리고 리베이트를 제안하다가 의협에 발각된 제약사는 의협 홈페이지에 이름을 공개하고 마스크를 통해 보도하겠다는 방침이다. 한편 의사들의 진료행위에 대한 정당한 대가 지급과 의산정 협의체 구성을 정부에 제안하며, 약제비와 진료비를 OECD 수준에 맞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 대한의사협회의 영업사원 출입금지 선언에 대한 반응 (2. 5)

우선 개원가에서는 수십년 간 관행적으로 이어진 리베이트 문제가 의협의 단절선언 만으로 해결될 수 없으며, 의약품 정보전달이 늦어지고 거대 제약사만 살아남아 독과점이 심해질 것이라는 우려도 보였다. 의협의 행보에 대해서는 더욱 이해할 수 없다는 여론이 높다. 지난해 말 대정부 투쟁을 선언하며 개원 의들의 참여를 독려했더니, 갑작스럽게 건정심에 복귀하고 이후 리베이트 단절선언까지 한 것이다. 이에 정부와 일종의 거래를 한 것이 아니냐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제약업계에서는 영업사원 출입금지가 시행된다면 업무에 상당한 혼선이 나타날 것이라며, 의협의 발표가 산업을 더욱 위축시킬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한 영업사원 출입금지령이 지속되면 오리지널약 처방이 증가해 결국 국내 제약산업을 악화시킬 것이라는 지적도 제기된다.

○ 건강증진협력약국 운영 관련, 의료계와 약계의 TV 토론 (2. 5)

건강증진협력약국은 서울시가 오는 4월부터 금연상담·포괄적 약력 관리·자살예방을 주제로 운영하는 것이다. 협력약국은 1인당 5회 금연관리 서비스 상담을 할 경우 15,000원, 포괄적 약력관리 서비스는 1인당 4회 서비스 제공시 14,000원의 상담료를 받는다. 이와 관련하여 윤용선 대한의원협회 회장과 유경숙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사무국장은 5일 TBS TV '예민수의 시사각각'에 출연해 협력약국 사업과 관련한 주요쟁점에 토론했다. 우선 윤용선 회장은 금연상담은 흡연이라는 질병에 대한 진료과정 중 하나로 이는 훈련된 의료인에게 맡겨야 하며, 현재 담배를 파는 약국도 많은 만큼 금연상담과 관련하여 이중성을 보이게 된다고 주장했다. 이에 유경숙 사무국장은 협력약국은 일반의약품과 의약외품(니코틴 패치)을 활용해 금연에 도움을 주고자 하는 것이고, 약물요법이 필요한 환자는 의료기관이나 보건소로 연계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의료계는 자살이 우울증 등 정신과적 질환을 동반하는 경우가 80%를 넘고 개인정보를 철저히 보호해야 하는데, 이를 공개된 장소인 약국에서 약사에게 맡긴다는 것이 납득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에 약계는 자살은 사회적인 질환이기도 하며, 지역에서 자주 보는 약사가 처지를 공감하고 대화를 나눈다면 많은 부분이 개선될 수 있고, 일종의 게이트피커 역할을 수행한다고 강조했다. 의료계는 포괄적 약력관리와 관련하여 현재 시행하는 DUR을 일반의약품으로 관리하면 되고, 약사가 약력관리를 하는 과정에서 질병상담·임의조제 등 불법행위가 성행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약계는 만성질환이 늘어나고 약물을 많이 복용함에도 불구하고, 주치의제도나 당번약국제도 등이 정착되어 있지 않아 관리할 체계가 없다고 말했다. 그리고 약국에서 처방하는 기록들은 모두 시스템화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의료기기산업계의 국민행복 정책 제안' 제출 (2. 5)

정책제안서에는 의료기기 산업을 발전시키고, 국민에게 양질의 의료기기를 제공할 수 있는 합리적 제도를 마련하기 위한 목적으로 12개 과제안이 담겨있다. 산업협회는 의료기기(치료재료)의 가격 및 보험급여 결정 등에서 정부가 상반된 정책으로 의료기기산업 발전을 저해하고, 양질의 의료기기를 시장에서 퇴출시켰다고 지적했다. 산업협회는 '지속가능한 의료기기 공급'을 강조하며 의료기기 허가 심사 및 신의료기술 평가 관련 제안, 체외진단용 제품 허가관리체계 구축, 국제기준에 맞는 의료기기 허가체계 개편, R&D 투자 의료기기 기업 및 성장유망분야 기술 집중지원 등을 제시했다. 그리고 합리적인 치료재료 관리를 위한 상한금액 산정 시 가치평가 방법 및 절차 개선 등을 제안했다.

○ 전정심공급자협의회, 전문평가위원회 운영 개선안에 반대 입장 발표 (2. 6)

복지부는 지난해 11월 전문성과 객관성 강화라는 목적으로, 전문평가위원회를 기존 전문가 단체장 등이 추천하는 위원 대신 300명 내외의 전문가 인력풀로 운영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한 '행위·치료재료 결정 및 조정기준' 개정안을 행정예고 했다. 이에 협의회는 이런 내용의 개정안을 전면 재검토하고, 각 전문가단체가 추천한 위원들로 운영하던 기존 방식대로 전문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의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의협·병협·간협 등으로 구성된 공급자 단체들은 1월 18일, 전문평가위원회 구성을 현행대로 유지해야 한다는 공동의견을 복지부에 제출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었다.

○ 대한치과의사협회, KBS에 정정보도 요구 (2. 8)

치협은 1월 21일 KBS2TV 프로그램 '굿모닝 대한민국'에서 방영한 '진화하는 보톡스, 필러 불법 시술' 내용이 치과의사의 권익을 심각히 훼손하고 침해했다고 판단해, 깊은 유감 표명과 함께 정정보도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이는 전국을 돌며 불법 성형시술을 해오다 구속된 사건을 방영하며, 치과의사의 치과 치료를 위한 보톡스 시술 외에는 모두 불법이라는 내용을 담았다. 이에 치협은 위에서 언급한 내용이 허위사실에 해당하는 명백한 오보라며, 2월 20일까지 해당 방송을 통해 합당한 분량으로 정정방송할 것을 요구했다.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언론중재위원회 제소 등 법적 절차를 밟는다는 방침이다. 치협은 치과에서 행하는 보톡스·필러 시술은 교육기관에서 교육되며, 국가인증시험인 구강외과전문의 시험 문제로도 출제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교근 및 교근 주변에 대한 보톡스 시술은 치과의사 고유의 치료영역이라고 덧붙이기도 하였다.

○ 대한한의사협회, IMS(근육 내 자극 치료) 시술 의사 무죄 선고에 반발 (2. 12)

한의협은 지난 11년 4월 정형외과 의사 정모 씨에 대해, 목 통증을 호소하는 환자의 이마 등에 침을 이용한 의료행위를 하는 등 면허된 의료행위 이외의 의료행위를 했다고 고발하였다. 이에 서울남부지법은 지난 7일 정모 씨의 행위가 한방 침술행위로 단정할 수 없다고 무죄를 선고했다. 한방 침술행위는 전통적인 한의학적인 원리인 경락 경혈 이론에 기초를 두고 있는데, 정모 씨의 IMS 시술은 위 원리에 바탕을 두지 않았다는 것이다. 즉 의료행위의 구분은 사용한 기구에 따라 구분되는 것이 아니라, 의학적 원리와 배경 그리고 구체적인 치료방법의 차이에 따라 구분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설명이다. 이에 한의협은 12일 성명을 통해 재판부는 한의학과 양의학으로 이원화되어 있는 한국 의료계의 특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고, 한의사의 고유 한방의료행위인 침술을 양방을 끌어들이기 위한 의사들의 획책을 비판없이 그대로 받아들였다고 비판했다. 그리고 11년 5월 대법원이 의사의 침 시술은 불법이라고 판결하였고, 국가적으로도 IMS를 정식 의료행위로 인정하지 않고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에서 그 적법성을 논의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한의협은 불법으로 한방침술행위를 자행하는 의사들에 대한 고소·고발을 진행할 예정이다.

○ 대한의사협회, 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 초빙료 현실화 주장 (2. 13)

의협은 마취행위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 초빙료' 수가가 현실에 턱없이 모자라, 수술 집도의가 대신 마취를 실시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말했다. 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가 상근하지 않는 요양기관은 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 초빙료(의원은 35,430원)가 실제로 의료기관에서 지급되는 비용(15~20만원)에 크게 미달한다. 의협은 유능한 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를 충분히 확보하고 있는 한국에서, 단순한 수가구조 문제로 인해 인적 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하지 못하는 것은 대단한 국가적 손실이라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하여 지난 제3차 건정심에서 마취과 전문의를 통한 적정 진료 강화를 위해 수가인상(100% 인상)이 필요하다는 논의가 진행되었다.

○ 대한의사협회, 제약사 영업사원 병의원 출입 금지 스티커 배포 (2. 13)

의협은 제약회사 영업사원의 의료기관 출입을 금지하는 스티커를 전국 의료기관에 배포하고 본격적인 리베이트 수수 단절을 선언했다. 노환규 회장은 13일 대회원 서신문을 통해 의사들의 리베이트 수수 단절을 당부하며, 높은 약가·제약업계의 관행·저수가 등의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여 리베이트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밝혔다. 의협은 이번 단절 선언을 통해 윤리적 부담 탈피, 진료수가 현실화 반대 명분 제거, 성분명처방 주장 명분 제거, 선택분업 주장 기틀 마련 등의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한편 PMS와 교육용 콘텐츠제작 역시 변형된 리베이트로 간주되며, 어떠한 금전거래도 삼가줄 것을 요청했다. 그리고 제약사 영업사원에 대한 접촉을 가급적 삼가며, 제약사 영업사원의 원장 동의 없는 병의원 직인 날인도 주의해 줄 것을 부탁했다. 한편 의협은 제약협회와 오는 20일 회동을 하고, 제약업계 영업사원의 병의원 출입 문제와 관련하여 공식적인 입장을 발표할 예정이다.

○ 무상의료운동본부 및 건강보험가입자포럼, 4대 중증질환 공약 관련 기자회견 개최 (2. 13)

이들은 서울 삼청동 금융연수원 앞에서 공동기자회견을 갖고,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기초노령연금 20만원 지급 공약을 파기하고 후퇴한 것에 이어 4대 중증 질환의 100% 국가 보장 공약을 파기했다고 말했다. 이는 민생대통령이라는 캐츠프레이즈를 내걸었던 박근혜 당선인이 복지공약 중 가장 중요한 공약을 파기한 것이며, 이런 상황에서도 국민과의 신뢰를 운운하는 것에 대해 매우 큰 실망과 분노를 감출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중증질환의 경우 특진비(선택진료비)·상급병실료(입원비)·간병비가 가장 큰 가계 부담이고, 이에 대해 '4대 중증질환 100% 국가 부담'이라는 공약에 많은 이들이 박근혜 당선인을 선택했는데, 지금 대통령직에 앉기도 전에 이와 같은 내용은 원래 공약집에 포함되지 않은 것이었다며 말을 바꾸고 있다고 성토했다.

○ 대한의사협회, 의료인 대상 폭행 관련 대책 마련 시도 (2. 13)

2월 7일 대구에서 정신건강의학과 의사가 진료 도중 흥기에 찢리는 사건이 발생했다. 현재 한국 의사 중 약 90%가 진료실 등에서 환자·보호자로부터의 폭력·폭언·협박 등을 직접 경험하는 등 의료기관 내 폭력행위가 심각하다. 노환규 의협회장은 13일 사건을 당한 의사를 방문하여 위로했다. 그는 의료인의 안전을 위한 법적·제도적 안전망이 구축되어 있지 않으며, 이는 환자의 안전도 보장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하여 의협은 의료인 폭행 방지를 위한 의료법 개정 및 진료실내 CCTV 설치 허용 등을 주장했다. 의협은 의료인을 폭행한 사람에 대한 가중처벌을 포함하는 의료인 폭행 방지 의료법 개정안을 재발의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 대한치과의사협회, '보건의료관련 직능단체 선거제도에 관한 연구' 발간 (2. 13)

최근 치협 협회장 선거제도 개선에 관한 주장이 강하게 제기되는 가운데 발간된 위 보고서에는, 직선제와 선거인단체의 장단점, 국내 보건의료단체 및 해외 직능단체의 선거제도 등을 총망라해 정리되어 있다. 여기에는 치협 선거제도 논의 경과에서부터 의협·한의협·약사회 등 직능단체의 선거제도 현황 등이 기술되어 있으며, 일본과 독일 등 해외 사례도 풍부히 제시되어 있다. 특히 치협회장 선거제도 개선 방안으로 제시되고 있는 직선제와 선거인단체의 장단점, 제도 도입시 고려사항 등이 포함되어 있다.

○ 대한병원협회, 의료기관 의약품 결제기관 조사결과 발표 (2. 14)

이는 지난 1월 114곳의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을 조사한 것으로, 병원에서 사용하는 의약품을 사들인 후 제약회사나 의약품도매업체에 약품대금을 지급하기까지 평균 147일이 걸리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대금결제 기간도 15일에서 690일까지 차이가 났다. 조사대상 병원 중 43곳은 90일 이내에 약품대금을 결제하고 있었으며, 71곳은 90일을 초과했다. 종별로 상급종합병원은 144일, 종합병원 177일, 병원 99일, 요양병원 93일로 나타나 규모가 클수록 약품대금을 늦게 지급하고 있었다. 병협은 병원들이 매월 심평원에 약제비를 청구하지만, 고가 의약품이나 심사보류 등의 이유로 약품대금 결제가 지연되고 있다고 말했다. 병원들이 약품 구매 이후 심평원에 청구하기까지 15~30일이 걸리며, 심평원의 결과를 통보받으려면 비슷한 기간을 더 기다려야 해서, 실제 약품 구매 시점부터 약제비 지급까지 약 90일에서 100일 정도가 소요된다는 것이 일선 병원들의 설명이다. 게다가 의료급여나 장애인 진료비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예치금 부족으로 제때 병원에 약제비가 지급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한국 요양병원의 현황과 환자 안전, 간병노동의 질 향상, 고용안정을 위한 토론회' (2. 15)

이번 토론회는 지난해 12월 진해동의요양병원의 33명 간병사 해고 사태를 계기로 나타난, 간병인의 노동권 보장 및 요양병원의 구조적 문제를 해소하고자 열렸다. 현재 장기요양서비스를 제공하는 요양보호사는 약 24만명(11년 기준)이며, 요양병원은 1,000개 이상 운영되고 그 수요는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 하지만 간병인의 현실은 열악한데, 우선 고용형태에서 요양병원은 용역 업체를 통해 간병사를 고용하고, 실질적으로 환자에게 간병사 비용을 부과하는 등 특수 고용 형태를 취한다. 보건의료노조는 이런 현실이 법적·제도적·구조적 문제에서 비롯되었다고 판단하고, 간병인의 노동자 법적 인정 및 간병사 처우 개선 등을 정부에 요구하고 있다. 발제자로 나선 임준 가천대학교 교수는 정부 지원과 법적 규제 강화를 동시에 진행하여 간병노동의 공식화, 민간요양병원의 공공적 기능 강화, 현물급여 방식의 간병급여화, 간병인에 대한 노동관계법 준수 및 정부의 지도감독 강화 등을 제시했다. 유나리 대한간병·요양보호사협회 사무국장은 정부의 '보호자 없는 병원'과 간호 인력 체계 일원화 정책 등으로 간병인의 대량 실업이 예고된다고 우려했다. 또한 요양병원의 요양보호사 기준을 간병인 1인당 환자 18명으로 정하고 있는데, 이는 평균 8.3대 1이라는 현실과 맞지 않은 모험으로 사실상 노동 강도가 심각해질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5. 질병/기타

○ 잉글랜드 및 웨일즈, 18년만에 최고 수준 홍역 (2. 1)

영국 보건보호국에 의하면 12년 홍역에 걸린 사람들은 잉글랜드와 웨일즈에서 2,016건이 확인되었으며, 이는 지난 94년 이래 가장 높은 수치라고 밝혔다. 12년 EU에 보고된 홍역 환자 7,392 중 87%가, 루마니아·스페인·이탈리아·프랑스·영국 등에서 발생했다. 이는 홍역-볼거리-풍진(measles-mumps-rubella/MMR) 백신이 자폐증이나 위장장애의 원인이라는 98년 MMR 논쟁이후, 예방접종을 하지 않은 10대의 대부분에게서 나타난 현상이다. 영국 보건보호국은 홍역이 전염성이 매우 높아 지역사회에 쉽게 나타날 수 있으며, 제대로 예방접종을 하지 않은 아이들에게 취약하다고 경고했다.

○ 일본, 인플루엔자로 3명 사망 (2. 2)

1월말에서 2월초 요코하마시 소재 우시오다종합병원에서는 환자 13명과 직원 2명이 인플루엔자에 집단 감염되었고, 이 중 70~80대 남성환자 3명이 숨졌다. 이들은 모두 현재 유행하고 있는 홍콩A형 인플루엔자에 양성 반응을 보였고, 열발진과 호흡장애 증상을 보였다. 현재 일본은 인플루엔자가 크게 증가하는 추세로, 1월 30일 현재 총 3,500명이 입원해 지난해 말보다 10배 이상 증가했고, 1월 21~27일 의료기관 당 36.44명으로 경보발령 기준인 30명을 넘어섰다.

○ 인플루엔자 대유행 원인, 지구온난화와 관련 (2. 4)

미국 애리조나주립대학연구진은 'PLoS-Currents:Influenza'에 게재한 연구논문에서, 따스한 겨울이 이듬해의 혹독한 인플루엔자 발생과 연관이 있다고 주장했다. 연구진은 97년 이후 나온 독감시즌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평년기온보다 높은 겨울이 지나고 이듬해 겨울에는 인플루엔자가 크게 유행할 가능성이 72%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따뜻한 겨울에는 기온과 습도가 높아 바이러스가 빨리 죽어 전파력이 떨어진다. 한편 해당년에 유행할 것을 대비해 제조한 인플루엔자 백신이 실제로 유행하는 바이러스와 어긋나 효과가 떨어질 수 있다. 일례로 지난 11~12년 겨울은 1월 1일 이후 발생률이 서서히 증가하면서 가볍게 지나갔지만, 12~13년 겨울은 11월에 시작해서 1월 19일 현재까지 6,200명이 입원하고 37명이 사망했다.

○ 식품의약품안전청, 모기 살충제 유해물질 검출 발표 (2. 6)

식약청은 현재 유통 중인 살충제 13개 성분 361개 제품에 대해 독성자료·위해평가 자료·외국 규제현황을 재검토한 결과, '클로르피리포스 유제' 함유 16개 제품을 허가 취소하는 등 총 10개 성분 347개 제품에 대해 안전성 조치를 취한다고 밝혔다. 이번 주요 조치 내용은 허가취소 및 회수폐기, 허가변경 및 자발적 회수, 사용상의 주의사항 강화 등이다. '클로르피리포스 유제' 성분은 인지능력 손상, 자발적 운동 능력 변화, 생식독성 발생 등의 우려가 있어 허가취소 대상이 되었다.

○ 미국 살인 독감, 대부분 지역에서 감소 (2. 9)

미국 질병예방통제센터(CDC)에 따르면 지난 2월 2일을 끝으로 미국 대부분 지역에서 인플루엔자가 감소하고 있다. 그러나 애리조나와 아칸소를 비롯한 19개 주는 여전히 독감 활동이 높다. 독감 활동이 거의 사라진 지역은 플로리다 등 6개 주이다. 이번 독감으로 59명의 어린이가 숨졌는데, CDC는 많은 노인들이 병원신세를 지고 있는 만큼 여전히 조심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 사람 간 전염 가능한 사스 유사 바이러스 발견 (2. 13)

BBC 등 영국 언론들은 보건국의 말을 인용하여, 최근 버밍엄에서 사스 유사 바이러스 감염자가 추가로 발견되었다고 보도했다. 사스 발생 환자는 이달 초 중동 지역을 다녀온 후 사스에 감염되었는데, 사스 유사 바이러스 질환에 걸린 환자와 인척관계인 것으로 보아 사람끼리의 접촉만으로도 감염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사례라고 설명했다. 영국에서는 그동안 사스 유사 바이러스 환자가 3명 발생했으며, 2명은 국외에서 동물과 접촉을 통해 감염된 것으로 추정되어 왔다. 그러나 첫 번째 환자가 발생한 후 3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더 많은 감염자가 나타나지 않아, 전파력은 매우 낮아 보인다고 설명했다.

○ 진드기 유래 신종 바이러스 질환 확산 (2. 14)

일본 후생노동성은 1일 진드기에서 유래한 바이러스 질환인 '중증 열성 혈소판 감소 증후군(SFTS)'으로 1명이 사망했고, 14일에는 2명이 사망했다고 발표했다. 진드기 매개 바이러스 감염은 09년 중국에서 발생한 것으로 알려져 있고, 길이가 3~4mm로 일반적인 집 진드기보다 10배 이상 크다. 이 진드기에 있는 플레보 바이러스가 인체에 침입하면 고열과 함께 구토와 설사 증상이 나타나고, 심한 경우 혈액 중의 혈소판이 줄어들면서 장기 손상으로 숨질 수도 있다. 살인 진드기는 한국에서도 존재하고 있으며, 질병관리본부는 14일 '중증 열성 혈소판 감소 증후군(SFTS)'에 대한 감시와 역학조사 활동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보건 당국은 감염 가능성에 대비해 풀밭에서 긴 소매 옷을 입고, 오래 누워있지 말 것을 당부했다.